
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민경신 총괄정책과장 (02-2100-1131) 김중우 지역산업과장 (02-2100-1142)
 산업통상자원부		이경호 지역경제총괄과장 (044-203-4410) 변재택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(044-203-4419)
2019.1.29.(화)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지역이 강한 나라, 균형잡힌 대한민국」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.

- ▷ 20개 부처, 17개 시·도가 함께 사람·공간·산업 3대 전략, 9대 핵심과제 추진
- ▷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·개선
- ▷ 지역 인구·일자리 비중 50%,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위원장 송재호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.29일 ‘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,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.
-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‘지역이 강한 나라, 균형 잡힌 대한민국’과 ‘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’을 위해,
 - 사람·공간·산업 3대 전략,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,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,
 -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, 3.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.

< 계획의 구성 >

균형발전 3대 전략			균형발전 지원 시스템	
사람 (51조원)	공간 (66조원)	산업 (56조원)	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	지역발전투자협약
			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	

-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‘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’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, 17개 시·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.

- 1 -

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】

-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.
 - ① 작년에 포용·분권·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‘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’의 법률적·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.
 -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, 17개 시·도, 각 시·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·과제를 구체화했다.
 -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.
 -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,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.
 -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·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.
 -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
 -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.
 - (1차) 132조원 → (2차) 161조원 → (3차) 165조원 → (4차) 175조원

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】

【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】

-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·물류망 조성,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,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,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.

- 2 -

- 또한,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,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.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'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·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,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,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 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, '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.

[**사람·공간·산업 3대 전략, 9대 핵심과제**]

- **(사람)** 우선, 지역에 '사람'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, 문화, 보건·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.
 -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·진학,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, 성장하고,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.
 -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,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
 -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,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,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
 -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(30%)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(3,600명)
 - ②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·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,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.
 -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, 문화도시 30개 육성,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
 - 유교·신라·가야 3대 문화권, 한반도 생태평화벨트, K-Ocean 루트 조성
 - ③ 보건·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·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,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.
 - 분만(40개소)·의료취약지(10개소) 거점의료기관 지원,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(원) 설립
 -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,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,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
- **(공간)** 농·어촌,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'공간'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.
 - ① 청년들이 농·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,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·귀촌교육·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.
 -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, 스마트팜 혁신밸리(4개) 및 스마트 양식단지(2개) 구축
 - 청년귀농 장기교육, 청년층 농촌보급자리 4개소 조성, 영농·영어 정착자금 지원
 - ②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·혁신성장센터 등 주거·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.
 - 어울림센터·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,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
 - ③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·제도 개편을 추진하고,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.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.
 -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, 마을기업 500개·일자리 1만개 창출
 -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, 접경지역 방문자 5.1천만명 달성,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확충
- **(산업)** 지역의 '산업'이 활력을 되찾고,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, 지역 유희자산 활용을 추진한다.
 - ① 국가혁신클러스터·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,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.

- 국가혁신클러스터, 6대 신산업 광역협력,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
- 수소 상용차 확산,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.6만개 창출
- 스타트업파크 추진,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, 지역대표 중소기업(1천개)·중견(50개) 육성
- 스마트 산업단지 10개,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, 산학융합지구 4개 등 확산

②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**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**(예 : 부산 - 첨단해양신산업)을 수립·추진하고, 혁신도시와 **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**을 촉진한다.

-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
-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, '19년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
- 혁신도시 입주기업 1,000개, 고용인원 2만명, 정주만족도 70점, 동반이주율 75% 달성

③ **유희·국유재산**의 전수조사, 노후청사 복합개발, **어촌·산촌자원 특화 개발** 등 지역 유희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.

-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(약 2백만 필지),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
-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, 향만지역 민간투자 3.6조원 달성
-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,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,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

□ 이와 함께, **17개 시·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**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.

【 계획의 실행 및 목표 】

□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**각 부처 및 시·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**해 계획을 이행한다.

-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, 9대 핵심과제 이행에 **‘19년에는 36.1조원, ‘20년에는 35.8조원, ‘21년에는 38.6조원, ‘22년에는 37.5조원**이 투입된다.

<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(단위 : 조원) >

구 분	총 계	(비 중)	2018	2019	2020	2021	2022
총투자액	174.8	(100)	26.9	36.1	35.8	38.6	37.5
▪ 국비	112.9	(64.6)	18.9	22.3	24.1	24.2	23.4
▪ 지방비	42.0	(24.1)	6.6	8.6	9.0	9.1	8.8
▪ 민자 등	19.8	(11.3)	1.4	5.2	2.7	5.2	5.3

- 5 -

□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**‘22년까지 지역의 인구·일자리 비중 50% 이상**을 달성·유지하고,

- ‘18년부터 ‘22년까지 **5년 동안 농·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**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.

□ 한편,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**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**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·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·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.

(첨 부)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변재택 사무관(☎ 044-203-4419)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남경우 전문관(☎ 02-2100-11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- 7 -

구 분	[핵심과제]	[관계기관]
균형발전 지원체계	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	기재부, 국토부, 산업부 등
	2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	균형위, 기재부 등
	3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	국조실, 국토부, 문체부 등
	4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협약) 본격 추진	균형위, 국토부 등
	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	균형위, 기재부 등
	6 지역혁신체계 구축	균형위, 행안부, 산업부 등

3대 전략		
(사람)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	1 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	교육부 등
	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·관광	문체부 등
	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	복지부, 여가부, 국토부 등
(공간)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	4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	농식품부, 해수부, 산업부 등
	5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	국토부 등
	6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	행안부, 농식품부 등
(산업)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	7 혁신도시 시즌2	국토부 등
	8 지역산업 혁신	산업부, 중기부, 과기정통부 등
	9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	기재부, 산림청, 해수부 등

- 8 -